

# 백신 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 상향

### 관련성질환 의료비 5000만원, 사망위로금 1억원 지급 접종후 42일내 사망, 사인불명 경우에도 1천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4차 접종을 독려하고, 동시에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도 개선했다. 정부는 백신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사망시 위로금을 1억원으로 상향했다.

백 청장은 "예방접종 이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관련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5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전에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백 청장은 "기존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자로 확인돼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성 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VTE), 다형홍반, (황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식약처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참고해 이상반응 인과성 기준을 결정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또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간적 연관성 인정 최대 기간은 국외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42일로 설정됐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45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광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국내 자료 기반으로 백신 안전성 근거를 지속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은 일상회복의 기초를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라며 "접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재환기자



### 완도해경, 해수욕장 사고 대비 민간안전관리요원 교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14일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위해 민간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요령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광양소방,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5일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강당에서 교직원 29명을 대상으로 남을 살리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광주동부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광주 동부소방서는 재난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 해양경찰교육원, 해경·경찰·소방 간부후보생 합동 교육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해양경찰, 경찰, 소방 등 3개 기관 간부후보생 102명(해경 21, 경찰 50, 소방 31)이 참여하는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주지방보훈청, '고령층 제대군인'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중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3일 5년 이상 군복무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양한목실에서 온라인으로 경기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승호기자



### 광주 첨단1동, '어린이 눈높이로 마음 전하는' 소통엽서 공모

광주 광산구 첨단1동 주민자치회(회장 광상민)가 25일까지 지역 어린이들이 엽서를 통해 이웃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희망' 등쪽 소통엽서 쓰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 "아빠, 나 폰 고장"...사이버사기·피싱 4개월 만에 1만2천명 검거

### 경찰청 집중단속 결과...전년 대비 14.5% ↑

최근 넉달 사이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등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온라인에 익숙한 10~30대였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사기·금융범죄 피의자 총 1만 207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70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 인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36명이었던 데서 14.5% 늘어난 수치다. 구속된 인원 규모도 509명에서 38.8% 증가했다.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5187명), 게임 사기(775명), 쇼핑몰사기(119명) 등 순으로 많았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1327명), 피

싱·파밍(175명), 뽀캠피싱(104명) 등 순이었다.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이버사기·금융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은 10~30대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확인된 피의자(미검거 포함) 중 65.9%가 10~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42.0%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도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3.2%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편취,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를 율해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했고, 메신저피싱·뽀캠피싱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해 관련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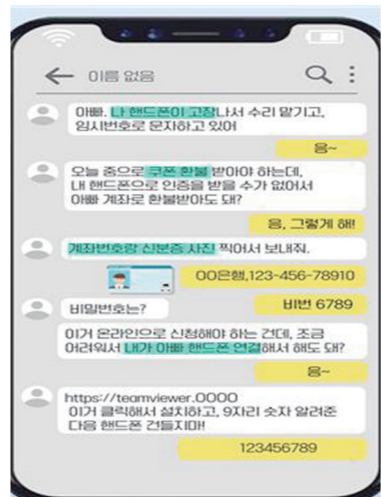
부산에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설한 뒤 대량의 홍보 문자를 발송, 여기에 속은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약 70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 16명이 붙잡혔고 그중 8명이 구속됐다.

서울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킷캣'이라는 고양이 캐릭터 향후 클레이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한 자체 발행 토큰을 주면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 2억1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뜯어낸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재개되면서 티켓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어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르는 번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로 가족, 친구라고 말하며 개인정



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이라며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승호기자



'더울 땀 즐거운 물놀이' 더운 날씨가 이어진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부하직원에게 갑질 의혹 부서장급 경찰관 검찰

### A과장 대기 발령 중

광주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괴롭힌 의혹에 휩싸인 일선 경찰서 부서장급 경찰관에 대한 갑질 조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갑질 의혹을 받는 광주 동부경찰서 A과장(경정)에 대해 갑질 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A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직분을 넘어서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이 같은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제보 등을 받고, A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과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기동취재본부